

■ '이명박 시대' 지방 어젠다

① 지역경제부터 회생

“지방 中企·고용부터 먼저 살려야”

25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과 함께 출범한 새정부가 지역경제 회생에 앞장서야 한다는 광주·전남 지역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가의 고공행진, 환율하락, 고용불안 등으로 인해 지역내 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다 새해 벽두부터 치솟고 있는 생활물가가 서민가계를 위협하는 등 총체적인 위기에 빠진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CEO 출신 대통령이 나서서 경제발전 전략을 직접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향적인 부동산 정책 시급”

이 대통령은 25일 취임사에서 “경제 살리기를 국정과제 1순위로 삼고 침체에 빠진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면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활성화, 문화산업 육성 등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지역민들의 ‘희망사항’과는 달리 수도권 규제완화, 5+2 광역경제권 개발계획, 부동산 정책 등을 둘러싼 새 정부의 움직임이 지역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되레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경우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이전계획을 포기할 뿐 아니라 지방기업들은 우수인재를 확보하는 데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걱정한다.

수도권 규제완화 차후에

강영태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수도권의 독점적 지위가 더

욱 공고해져 지방경제 붕괴를 앞당길 것”이라며 “먼저 중소기업 활성화, 고용창출 등 지역발전 관련 대책을 세운 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5+2 광역경제권 개발계획’ 역시 수도권 규제완화와 맞물려 수도권·충청권과 호남권의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손용업 전남대 교수는 “외지·외국기업들이 호남으로 들어올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을 제시하지 못한 계획”이라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광역권내 지역간·기업간 유기적인 연계대책을 마련하고 외국인의 최저 투자한도, 과실송금, 소유권 문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취득세 인하, 분양가 상한제 완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을 골간으로 하는 새정부의 부동산 정책

도 수요층이 거의 허물어진 지역시장에 일으켜 세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지역 균형발전 우선돼야

박치영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장은 “공급과잉에 따른 수요부족도 지역 건설경기의 침체 정도가 더 커질 뿐 아니라 현행 300억원 공사에 적용되는 최저가 낙찰제가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될 경우 지역 중소기업들에게는 치명적”이라며 “최저가 낙찰제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재검토, 공공택지 전매제한 폐지 등 전향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홍 광주경실련 정책부장은 “새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지역에 지속적으로 배려해야 지방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화순 모후산 올 첫 나무심기

올해 전국 첫 나무심기 행사가 27일 화순군 남면 유미리 모후산 자락에서 열렸다. 이날 나무심기는 화순군청 공무원과 학생, 주민 등 500여명이 참가해 4년생 고로쇠 나무 3천 그루를 모후산 일대에 식재했다.

이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제42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제43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제43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는 오는 3월 1일(수요일)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개최됩니다. 제43회는 광주광역시청에서 나무심기에 이어서는 다양한 행사행사를 따라 경주합니다. 새 봄을 맞는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 참가한 동호인 여러분께 많은 성명 부탁드립니다.

● 일시 및 장소 : 2008년 3월 1일 광주광역시 동구
● 경 계 부 (코스) : 10km, 5km
● 문 의 : 인터넷 홈페이지(http://marathon.kwangju.co.kr) 전화 (062) 220-2541

● 주 회 : 광주일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주 관 : 광주 전남육상경기연맹, 전국마라톤여행기획
● 후 원 : 광주지방보훈청

● 협 찬 : 대주 파로레, 금호아시아나, 광주은행, KCB, 국민은행, SK telecom, 장정균, 대원군, 무안군, 영일군, 해남군, 화순군

“유류세 인하 새 정부 최우선 과제”

강만수 기획재정 내장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내장자는 27일 재정경제부가 유류세를 10% 낮추기 위한 절차를 추진중이며 취임

후 최우선적으로 유류세 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11면> 강 내장자는 또 “규제완화와 감세를 조기에 추진하고 세계인여금 등 경기역진적 요소를 조기에 해소하면

올해 6% 가까운 경제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 내장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예산을 절감해 경제활성화와 감세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재정 기능을 강화하고 유류세 인하를 통해 서민생활비의 부담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남주홍·박은경 사퇴

새 여성부 장관 변도윤씨 내정



변도윤 내정자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남주홍 통일부 장관 내정자와 박은경 환경부 장관 내정자의 사표를 수리한 데 이어 이미 사퇴한 이춘희 전 여성장관 내정자 후임으로 변도윤(61·여) 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을 임명했다.

각료 내정자들이 장관 임명도 받기 전에 3명이나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도마에 오른 것은 물론 당분간 내각 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국정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옹퇴 의사를 전해 (이명박 대통령이) 대응적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여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주홍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이념적 편향성 논란과 함께 자녀 이중국적, 부인의 부동산 투기, 교육비 이중공제 의혹 등으로 야당의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박은경 환경부 장관 내정자도 부동산 투기 및 위장전입, 편법증여 의혹 등이 제기돼 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제집 한나라당 대표, 안상수 원내대표와 긴급 회동을 갖고 일부 장관 ‘교체’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 자리에서 강 대표 등은 일부 장관 후보의 자진 사퇴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

광주 북구(갑)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장병완 후원회

여러분의 후원은 깨끗한 21세기 정치의 밑거름입니다.

장병완 후원회 (후원회장 조 담) ☎ 농 협 176086-52-123517 (예금주 : 박수경)

후원 방법
- 단체나 법인은 불가하고 개인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 후원회비가 아닌 별도 후원금을 내실 수 있으며 연간 500만원까지 후원이 가능합니다.
- 1회 10만원 이하, 연간 50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현금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 후원회비는 관공회 각종 세금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

걸어온 길
● 광주서석초 졸업 ● 기획예산처 장관
● 광주서중 - 일고 졸업 ● 기획예산처 차관
● 서울대 무역학과 졸업 ●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 행정고시 합격 ● 경제기획원 등 경제부처 33년 근무
● 해병대 중위 전역 ● 민주당 - 열린우리당 수석 전문위원
● 행정학 박사(중앙대) ● UN-ESCAP태민권투자장관회의 의장

호남이 낳은 경제장관, 장병완이 광주를 살리겠습니다.

후원회 사무소 :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333-6번지 ☎ 전화:062) 331-0414 ☎ 팩스:062) 524-0427 ☎ 홈페이지 www.lwchiang.kr

정부 조직 2월 15부 2차 확정

공무원 3천427명 감축

이명박 정부의 중앙정부조직이 참여정부 때보다 3부 2차 1월 5일 위원회가 출범한 2월 15부 2차 18청 3실 5위원회를 확정했다. 또 국가공무원도 장·차관급이 16명 줄어드는 등 총 3천427명이 감축됐다.

정부는 27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한 각 부처 직제 및 개별법령 113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은 2월 18부 4청 18청 4실 10위원회(총 56개 기관)에서 3부 2차 1실 5위원회(총 11개 기관)이 줄어들어 2월 15부 2차 18청 3실 5위원회(총 45개 기관)로 개편됐다. 하부조직은 실·국이 573개에서 511개로 62개, 과가 1천648개에서 1천544개로 104개 줄어드는 등 총 166개가 줄어들었다. 정부 인력의 경우 장관급이 10명, 차관급 6명 등 정무직이 총 16명 줄고 고위공무원들은 62명, 3·4급 이하 공무원들은 3천349명 등 총 3천427명이 감축됐다.

한편 중앙부처의 1급 공무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27일 알려진 공직 사회의 대대적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27일 과천 관가에 따르면 중앙 부처의 1급 공무원들은 청와대의 방침에 따라 예외없이 사표를 제출했다. /연남스

유망직업 전망 58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남부대학교

남부대학교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후원회 광고 접수합니다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후원회

광주일보 광고이메일